

한국민주주의투쟁의 보편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들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

1. 머리말
2. 한국 민주화운동의 제3세계적 위상과 그 특징
3. 미국 헤게모니체제 하의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선도적인 저항
4.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보편사적 — 맥락 ‘중층적·압축성장형 민주주의 투쟁’
5.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민주주의투쟁에 남겨진 과제들
 - (1)민주개혁투쟁과 ‘왜곡된 국가’와 ‘왜곡된 시장’의 개혁에서의 선도성
 - (2)과거청산을 둘러싼 투쟁에서의 선도성
 - (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을 향한 동력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
6. 요약 및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 민주화운동 혹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성격과 의의, 현단계적 과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글이다. 그런 목적 하에서, 먼저 한국민주화운동의 특성—특히 그 영웅적 투쟁과 그를 통한 희생, 민주화운동 자체의 유의미한 특징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한편에서는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국 헤게모니 체제하의 반공개발독재에 대항하는 선도적인 투쟁이었음’을 밝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 이후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 민주주의 실현 투쟁의 전개과정—특히 3가지 국가수준에서—을 살

펴봄으로써 한국민주화운동의 보편사적 의의를 조명해보자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한 투쟁으로서 전개되었는데 정작 복원된 민주주의의 조건하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5절에서 필자는 구 권위주의 체제의 개혁, 과거청산, 민주화와 함께 전개되는 세계화라고 하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고 주체적·탈(脫)식민화적 시각에서 우리 민주화운동을 조망할 필요를 제시하게 된다.

한 사회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이 다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게 된다. 61년 이후 87년까지 군부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개발독재적 반(反)민주주의체제에 저항하는 민주주의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87년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은 형식적·제도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것을 실질화하고 그것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투쟁(democratic struggle 혹은 pro-democracy struggle or move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2. 한국 민주화운동의 제3세계적 위상과 그 특징

1961년 개시되는 한국의 군부권위주의정권은 제3세계 권위주의 시대 혹은 개발독재시대를 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맞서는 한국의 영웅적인 민주화운동은 바로 그 군부권위주의시대의 종말을 앞당긴 지속적 투쟁이었다고 생각된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60년대는 개발독재정권이 지배하던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다. 개별 국가에서 독재정권이 출현한 형태나 그것의 폭압성의 정도는 다양하였지만, 7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물결이 도래하기까지 유행처럼 독재정권의 망령이 제3세계를 지배하였다. 헌팅턴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민주화의 '제2차 반전'의 시기이다¹⁾. 그리고 이에

맞서는 영웅적인 투쟁들이 전개되었고 이는 물론 무수한 희생을 낳았다. 58년 파키스탄에서의 군부 정권 등장, 61년 5월 한국의 박정희 군사쿠데타는 그러한 거대한 행렬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65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가 300만 명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괴멸시키면서 등장하여, 98년 퇴진할 때까지 그 폭압성을 자랑하였다. 72년 필리핀의 마르코스도 계엄령을 선포하여 권위주의체제로 돌아섰다. 심지어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에서도 67년에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조하였으며, 포르투갈에서는 74년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73년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린 피노체트의 군부쿠데타는 제3세계의 악명 높은 철권통치였다. 아옌데 정권 붕괴 이후 무려 30여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그 폭력성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66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무수한 저항을 통해 73년 군사정권이 무너졌으나 다시 76년 비델라 장군이 이끈 군사정권이 등장하여 악명 높은 '더러운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 전쟁으로 적게는 9천명, 많게는 3만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페루에서도 62년과 68년에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가 있었다. 68년부터 시작된 군사정권이 80년 종결될까지 정치적 살인 및 실종 만 3,000~8,000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순탄한 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되는 브라질에서는 64년부터 85년까지 군부정권 시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살인 및 실종은 250명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반란군 사이의 전쟁으로, 80년부터 91년까지 무려 7만 5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되어있다. 1932년 이후 태국은 쿠데타의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쿠데타가 이루어지는 길목마다 대대적인 학살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은 혁명기념일이 되고 있다. 71년의 학살, 76년의 학살, 92년 5.18학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사실 제3세계 현대사는 (군부)독재정권의 학살과 폭압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민주주의투쟁의 역사였다²⁾. 이 과정에서 민중들의 무수한 희생이 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제3세계 현대사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진실 그 자체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³⁾.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 및 의사(擬似) 군부정권인 노태우 정부 하에서 무수한 희생들이 이루어졌다. 정작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박종철이나 이한열과 같은 상징적인 사건만을 기억할 뿐 그다지 큰 희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27년간의 군부정권 시기 동안 사망한 사람만도 507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항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4)에 사망으로 유족들이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은 보상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한다 282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유족이 없는 경우나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도 많을 것이다). 광주 학살 외에, 군부권위주의정권 시기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유족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5)에 보상을

-
- 2) 동아시아에서의 경제기적의 과정이 민중부문, 특별히 노동의 통제와 저항, 위기의 과정이었음은 Bello, Walden and Stephanie Rosenfeld, 1992, *Dragon in Distress: Asia' Miracle Economies in Crisis*, San Francisco: A Food Book 참조.
 - 3) 정치학적 이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정치 폭력(political violence)으로 접근한다. 이런 수단에는 암살, 학살, 사형, 고문, 폭동, 재산 파손, 테러리즘이나 내전까지를 포함한다(Rossi, Ernest and Jack D. Plano, 1980, *The Latin American Political Dictionary*, Santa Barbara: ABC-Clio, pp.90-92). 지배나 저항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운동이 사용하는 일체의 ‘파괴적’ 수단이 정치 폭력으로 포괄되는데, 여기서는 지배의 폭력과 저항의 자위적 수단 및 희생은 구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은 바로 후자의 의미에서이다.
 - 4) 광주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제정되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담당했던 기구이다. 2002년 1월 16일 공포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주민주항쟁 관련자들은 국가유공자로 되었다.
 - 5) 박정희가 장기집권의 길로 가는 출발이라고 인식되는 69년 8월 7일 3선 개헌 국회 발의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9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는데, 이 법에 따른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신청한 사람들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하여 225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만도 얼마만큼 큰 희생을 치루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투쟁 사례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학생운동이나 지식인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69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을 한 것을 직업별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인데, 이를 보면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희생된 집단 중에서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원과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원들의 경우 전교조 관련 해직이 1,400여 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사립학교 관련 해직,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 제외 등이 사유를 이루고 있다. 언론인들의 경우는 75년 및 80년의 해직 등 특정계기의 희생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사들이나 언론인들도 지식인운동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학생운동을 포함한 지식인집단의 운동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한국전쟁 이후 국가보안법이나 연좌제 등 각종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한 백색테러리즘에 의해 기층민중운동이 철저히 금압되고 굴종을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운동을 포함한 지식인집단의 운동이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통해서 정치사회적 공간을 확장하면서 그 공간에 힘입어 기층민중운동이 성장하는 경로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표 1〉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자의 직업별 구성

구분	계	학생	교원	언론	노동	기타
신청자 수 (명)	10,807	3,760	1,998	798	1,795	2,456
비율(%)	100	34.8	18.5	7.4	16.6	22.7

출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다음으로 제3세계 많은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큰 희생들이 권위주의정권의 공격적 학살행위나 특정 폭력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경우, 폭력적 권위주의정권에 의한 학살, 의문사 등과 같은 ‘소극적 희생’(victim)에 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적극적 희생(sacrifice)이 많았다는 것이다⁶⁾. 이것은 아래 표에서 보상과 명예회복의 두 희생 유형 중 명예회복 유형이 크게 많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2>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희생을 감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신청한 자료이다.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의 고통을 감수하여야 했으며, 사망, 행방불명, 상이 등의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 1,295명에 이르고 있다(이 자료들은 자신들이 희생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나, 60년대 말 이후의 희생의 경향이나 지속성 자체는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명예회복을 구성하는 유죄판결이나 해직사건, 학사징계 등은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의식적이고 자기희생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적이고 자기희생적인 투쟁은 30여 년에 이르는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전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61년부터 군부정권이 퇴진하는 87년까지의 시기에, 위수령이나 계엄, 긴급조치 등과 같은 억압적 정책이 취해지지 않은 해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민주화운동의 지속성과 견결성이 돋보인다.

<표 2> 69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의 유형

6) 국가폭력과 그에 대항하는 민주주의투쟁 속에서의 희생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편, 2002,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희생』, 함께 읽는 책.

시도별	계 (백분율)	보상				명예회복				
		소계	사망	행방 불명	상 이 (질병)	소계	유죄 판결	해직	학사 징계	기타
서울	3119 (28.86)	383	79	3	301	2736	1711	894	131	
인천· 경기	2402 (22.23)	202	54	2	146	2200	1253	894	53	
강원	274 (2.54)	23	5		18	251	163	84	4	
충청	678 (6.28)	63	18		45	615	354	237	24	
호남	2067 (19.13)	359	50	4	305	1708	1062	545	101	
대구· 경북	744 (6.88)	97	24	2	71	647	391	229	27	
부산· 울산· 경남	1421 (13.15)	156	37	1	118	1265	752	463	50	
제주	102 (0.94)	12	3		9	90	38	47	3	2
계	10807 (100)	1295 (12.0)	270 (2.5)	12 (0.1)	1013 (9.4)	9512 (88.0)	5724 (53.0)	3393 (31.4)	393 (3.6)	2 (0.0)

출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셋째, 민주화운동의 일반적인 투쟁형태는 저항의사를 표출하는 집회나 시위 등이 많고 이러한 투쟁이 고양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기관이나 억압적 국가기관 요원들에 대한 테러 등 공격적인 투쟁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고양국면에서도 공격적 투쟁보다는 분신, 투신 등의 자살행거⁷⁾와 같은 자기희생적인 투쟁양식이

7) 분신투쟁의 대표적인 시기는 91년 5월이다. 5월 시기의 분신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91년 5월 투쟁 청년모임 편,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 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후: 김정환, 1998, 『대중과 폭력』, 이후.

채택된다고 하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분단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저항 폭력'의 규율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⁸⁾, 한국민주화운동은 비록 분노를 내적으로 표출하는 자살항거와 같은 일견 소극적인 것 같은 투쟁양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를 통해 높은 도덕성을 드러내고 국민적 공분과 참여를 촉발해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자살항거는 한편에서는 체제의 부정의와 정당성 부재를 상징화하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향한 최고의 희생을 상징화한다는 점에서 중간자적 집단이나 방관집단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왔다⁹⁾. 분신이나 투신 등과 같은 '자학적' 투쟁에서 보이는 자기희생성은 한국민주화운동의 높은 도덕성과 그에 대한 존경이 유지되는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3>은 유가협에서 열사로 분류한 분들의 명단이다. 이 표에서 분신, 할복, 투신, 음독, 목매 등은 자기희생적인 자살항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60년대부터 1997년까지 89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은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 많지만, 민주주의투쟁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가의 경향성은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의 죽음형태 분류

<2001. 10. 1 현재>

-
- 8) 필자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를 '반공규율사회(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로 전화되었는데(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2장 1절, 분단과 '반공규율사회' 참조), 이 반공규율은 한편에서는 국가폭력의 규율로 다른 한편에서는 저항폭력의 규율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 9)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효정, "집합행동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연구", 제4회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포럼, 2002.10.4. 성공회대 새천년관 4층 교수회의실.

		자 살					단식	타살	의문의 죽음	병사	사고사
		분 신	할복	투신	음독	목매					
박정희정권	1960년대										
	1970	1									
	1971						1				
	1972										
	1973							1			
	1974										
	1975		1						1		
	1976										
	1977										
	1978								1		
	1979			1							
소 계	1	1	1				1	3			
전두환정권	1980	1		1				1			
	1981			1					1		
	1982							2			
	1983			1				5			
	1984	1						1			
	1985	2			1			1			
	1986	7		2	1			3			
	1987	6		1		2	4	9	1	6	
	소 계	17		6	2	2	4	22	2	6	
노태우정권	1988	8	1	1			1	6	4	2	
	1989	10		1			3	3	1	1	
	1990	6		2	1	1		2	4	3	
	1991	12		1			2	4	2	4	
	1992						1	1	6		
	소 계	36	1	5	1	1	7	16	20	10	
김영삼정권	1993	2							11	3	
	1994	1			1	1			6	4	
	1995	5				1		1	2	2	
	1996	4					1	2	1	5	1
	1997	1			1			4		2	
	소 계	13			2	2	1	6	2	26	10
						2					
합계	67	2	12	5	3	1	18	42	39	22	

출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http://www.ugh.or.kr>)

참조: 이 표에는 분신, 투신, 타살, 의문사, 사형, 고문사, 병사, 사고사 뿐만 아니라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여 '열사'로 분류된 '자연사한 민주화투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기수는 제외되어 있다.

3. 미국 헤게모니체제 하의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선도적인 저항

다음으로 한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전후 미국 헤게모니¹⁰⁾ 체제 하에서 작동하는 제3세계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anticommunist developmental authoritarianism)에 대항하여 치열한 저항운동을 펼친 선도적인 사례였다.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은 신식민지파시즘, 개발파시즘, 군부독재정권, 군부권위주의정권, 개발독재정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4반세기의 남한을 지배하였는데, 이는 남한만의 독특한 체제는 아니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대면하고 있었던 권위주의정권은 단순히 국내적 맥락에서만 성립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대면하고 있었던 권위주의정권을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체제적 조건 속에서 조망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의 막강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배후로 하면서 60년대 이후 미국의 제3세계 전략에 조응하는 체제였다. 한편에서는 반공주의적 정책으로 무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주의 정책을 통해 반공체제의 물질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부정권을 포함한 권위주의정권을 현지 통치파트너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후 미국의 제3세계전략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공주의와 개발주

10) 여기서 헤게모니라고 할 때, Cumings의 표현을 빌면, “비(非)헤게모니 국가가 이 탈할 경우 심대한 위기를 감수해야 하는 경제, 정치, 국제안보관계에서의 외적 한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대만, 한국에서의 성장은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 내에서의 성장이었다.(Bruce Cumings, 1987, “The Origi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Frederic C.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의로 무장한 한국의 박정희 군부권위주의정권은—초기 출범과정의 논란에도 불구하고—이러한 미국의 제3세계 전략에 충실히 부응하는 정권이었다.

20세기 전반을 통해 영국 등 서구강대국들을 압도하는 경제력을 확립한 미국은 브레튼우즈협정 등을 통해 그 경제적 지배력을 제도화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소련과의 대결 속에서 전세계적 냉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체제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미국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전후 체제' 하에서 60년대 이후 제3세계에는,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며, 경제적으로는 개발 및 성장을 지향하는,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반공주의를 내면화한 체제가 연이어 성립하게 된다.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파쇼, 독재 혹은 파시즘 등으로 불리는 억압적 체제였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고, 근대화와 산업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발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철저한 반공을 표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반공주의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체제는 반공주의, 개발주의, 권위주의가 복합되어 있는 체제였다. 물론 권위주의의 형태라는 점에서 우익 민간권위주의의 형태를 띠거나 혹은 군부가 주도하는 우익 군부정권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공주의-개발주의 권위주의정권은 2차대전 이후 제3세계 신생독립국의 발전경로의 하나였다. 즉 신생독립국들은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종속적 자본주의발전'의 경로로 나아가든가 자립적 민족경제를 지향하는 '비동맹주의' 입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발전경로로 나아가기도 한다. 사실 2차대전 이후 제3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극우 반공주의적 지향보다는 좌우 통합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적 지배가 되살아날 수 있는 종속적 발전의 경로보다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향은 1955년 반동회의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강화된 영향력 속에서, 또한 개별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극단화 속에서, 이러한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이 지배적인 형태로 부상하게 된다.¹¹⁾ 반동회의를 주도하였던

인도네시아에서 1965년 수카르노 정권이 붕괴하고 반공주의와 개발주의를 전면에 내건 수하르토 군부정권이 출범하는 것은 이것의 상징이었다.

일찍부터 분단 상황하에서 (극우)반공주의체제로 고착화되었고 그 속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한국에서 1961년 군부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개발독재시대가 개막되는 것은 여타 제3세계에서 나타날 정치적 전환의 서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이러한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이 출현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내전'의 경험으로 통해서 반공주의가 극단화되어 있는 체제였으며, 여타의 사회에 비해서 개발주의적 지향이 강력하게 존재하였던 체제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강력한 개발주의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체제가 되는 토양이 되었다. 80년대까지 한국이 '반미무풍지대'라고 불렸던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예외적'인 특수성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60년대 이후 제3세계의 개발독재정권들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전후 체제에 대한 선구적인 전투적 투쟁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장기집권을 시도하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투쟁대상이 되는 지배체제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그 운동은 전후 세계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을 향해 투쟁하는 것이었다.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였던 박정희 정권에 철저히 맞섰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전후 체제의

11) 경제적 자립, 민족통합적인 정치체제, 반식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시민사회의 수렴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초기 '비동맹주의'적 제3세계는 전반적으로 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종속적 발전, 억압된 시민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제3세계'로 이행한다. Cho, Hee-Yeon, 2002, "For Revival of the 'Third World' in the Contex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Asia-Africa Beyond Globalization' hosted by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and et. al., Bandung, Indonesia, June 23-July 1.

균열을 가속화한 대표적인 투쟁이었다.

더구나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더 큰 상징성을 갖는 것은, 한국의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군부권위주의체제가 경제적 개발이라는 점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전후 미국헤게모니 체제의 쇼윈도우로 부각되고 있었다는 점에서이다¹²⁾. 미국의 제3세계 경제개발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로 - '실패' 사례가 아니라- 부각되는 속에서, 바로 그 성공의 현장에서 그와 치열하게 대결하였던 운동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60년대 말을 거치면서 제3세계 개발주의체제 내에서는 발전도상국과 신흥공업국, 주변부와 반(半)주변부의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이른바 신흥공업국 혹은 반주변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투쟁을 전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의 성공사례로 위치 지워지고 그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체제를 균열로 몰아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전후 체제의 핵심현장에서 그 체제의 균열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드러낸 투쟁으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

물론 반공주의-개발주의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직선을 그리면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저항을 크게 나누어보면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낮은 수준의 투쟁과 그에 대한 억압(5.16군사쿠데타 이후 60년대의 권위주의와 저항운동의 갈등) -억압에 대응하는 투쟁의 점진적인 고양(60년대 말-70년대 초의 민주화운동)-고양되는 투쟁을 통제하기 위한 '전체주의'¹³⁾화된 억압체제로의 재편(72년 10월 유신의 성립) 그러한 강화된 억압체제를 균열시키게 되는

12) 전후 미국의 재건플랜의 성공적 사례가 된 일본, 일본의 성장흐름에 연속하여 신흥공업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냉전적 대결이 가장 첨예하였던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지정학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Bruce Cumings, 1987, *ibid*).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사례에 대해서는 국가중심론, 시장중심론, 유교문화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각축할 정도로 서구학계의 흥미로운 연구대상이었다(So, A.Y. and Stephen W. K. Chiu, 1995, *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Ch. 1 참조).

투쟁의 고양(반유신 민주화운동의 고양) 이에 대응하는 권위주의정권의 유혈적(流血的) 재편(80년 광주학살과 전두환 정권의 등장) 이에 굴하지 않는 민중투쟁의 클라이맥스화(87년 6월 민주항쟁)와 군부정권의 퇴진 및 제도적 민주화”의 경로를 밟았다¹⁴⁾.

한국의 민주화투쟁은 바로 이러한 여러 단계에서 제3세계 민중투쟁의 선도적인 사례로 위치 지워져 왔다. 먼저 60년대·70년대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군부권위주의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을 통해서였다. 다음으로는 80년대의 화려한 반독재투쟁을 통해서이다. 1950년 ‘내전’이 휴전으로 종결된 후 극단적인 극우반공주의가 지배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반체제저항운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엄혹한 극우반공주의적 조건을 뚫고 민주화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박정희 체제를 붕괴시키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정권의 유혈적 재편과정에서 자행된 민중학살과 그에 대응하는 무장저항을 통해서이다. 광주민중항쟁은 하나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마는, 60·70년대 민중투쟁의 총화라고 할 수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에는 민중들의 민주화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행사되었던 사건이며 또한 그에 대응하여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자위무장투쟁이 전개되었던 사건이었다. 광주항쟁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제3세계 민주화투쟁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결과로서의 양민학살을 통해서

13) 국가폭력이 일상화된 체제를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고 할 때, 국가의 동의 기반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강압과 폭력이 일상화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보수파 학자이자 외교가인 프리드리히 브레진스키(1956)가 이야기하는 ‘전체주의 증후군’에는 공식적인 통제이념, 단일 엘리트 지시의 대중정당, 테러경찰 통제체계, 매스미디어 통제권의 완전한 독점, ‘실질적인 무장 전투’에 관한 지배정당의 독점적 통제, 중앙통제 및 지시경제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72년부터 79년까지의 유신체제가 이러한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파시즘과 발전주의와의 결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 James Gregor, 1979, *Italian Fascism and Developmental Dictatorship*,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4) 한국사회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편, 1992,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제3세계 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의 부당성과 불의를 전세계와 제3세계에 드러냄으로써 전후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시켰다. 다른 한편에서 광주민중항쟁은 그러한 야만적인 국가폭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영웅적인 투쟁을 통하여 전후 개발주의적 권위주의체제의 극복 가능성과 필연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실 광주민중항쟁은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을 파트너로 하여 제3세계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던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반(反)인권적인 정권을 유지하는 미국의 제3세계 통치전략이 더 큰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함으로써,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이 가속적으로 전환되는 한 계기가 된다. 특별히 ‘반미무풍지대’이자 무장투쟁이 비록 자위적이기는 하지만 전무(全無)하였던, 그리하여 미국의 헤게모니가 가장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던 한국에서의 이러한 투쟁은 이제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함을 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후 ‘민주화의 제3의 물결’(third wave of democratization)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 이러한 두 가지 투쟁에 더하여 한국의 80년대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이미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전략을 선택한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이 아시아 전역으로 파급되면서 관철될 수 있는 계기적 투쟁을 제공하게 된다.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이 전환되더라도 그것은 개별 나라에서의 권위주의세력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않거나 타협적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80년대 한국의 민주화투쟁은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하여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80년대 한국에서는 ‘전투적’인 저항이 지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80년대 투쟁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서구에서도 민주화를 지원하는 여론과 지원이 강화된 것은, 미디어 보도의 역할도 컸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미디어의 영역에도 관철되면서 한편에서는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 지배를 정당화 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치열하

게 전개되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주요 매체 특별히 CNN과 같은 방송매체에서 자주 다루어짐으로써, 아시아의 제3세계 투쟁이 확산되고 고무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전후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의 현장에서 그것에 대항하여 선도적인 전투적 저항을 보임으로써 전후체제의 균열을 가속화시킨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 민주주의투쟁의 민주주의 보편사적 맥락 '중층적·압축성장형 민주주의투쟁'

2차 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의 가장 선도적인 민주화투쟁이었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의의는 전후체제의 맥락에서만 아니라, 근대 이후의 보편적인 민주주의 투쟁(pro-democracy struggle)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보편사적 맥락에서 조명해 보고 그 의의를 찾아 보자.

60년대 이후 한국과 제3세계에서 전개되었던 민주화투쟁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희생들은 근대 이후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기나긴 인류사적 투쟁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근대 이후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목표로 정착시킨 사건이었다. 1789년 8월 14일 봉건적 학정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형무소 소장과 파리시장을 즉결 처형함으로써 시작된 프랑스대혁명은, 민주주의를 근대 이후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정치원리이자 제도로 정립하였다¹⁵⁾. 아무리 독재정권이라도 자신

15) 폴란차스는 자본주의적 예외국가와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를 나누고 있는데, 예외국가라고 하는 것은 파시즘이나 제3세계 군부정권 등을 지칭한다. 여기서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정치적 상부구조로 (대의)민주주의가 표준적인 모델로 확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Poulantzas, N., 1974, Fascism and Dictatorship, London: NLB; Jessop, B., 1985, Poulantzas: Marxist Theory and Political Strategy, London: Macmillan).

을 민주주의의 변종(變種)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다. 한국의 박정희 독재정권도 자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표현한 바 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단지 인류가 추구하여야 할 보편적인 정치 원리와 제도로 선포되었을 뿐, 개별 사회에서 이를 현실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무수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서였다¹⁷⁾. 심지어 프랑스에서조차도 공화정을 짓밟으며 출현한 제정(帝政)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다. 보다 급진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였던 파리코뭉 역시 엄청난 희생으로 막을 내려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1870년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이 무너진 후 공화정의 복원을 우려하는 왕당파와 보수적 ‘부르주아지’가 외세(독일)의 힘을 빌려 제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국민방위대를 공격하고자 하였을 때 이에 대항하여 노동자 등 파리민중들이 파리를 장악, 72일 동안 파리를 자치해방구로 만들었던 파리코뭉에서도 수천명의 희생자들이 있었다. 근대 이후의 인류역사는, 바로 이처럼 보편적 제도로 확립된 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압살하고 민중들의 시민적·정치권 기본권리를 부정하고자 하였던 반(反)민주적(anti-democratic) 정권 대(對) 민주주의를 성취하거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였다.

이런 점에서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적 상부구조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실질화는 결코 구조결정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 ‘유형’의 지배적인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확립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에 의해서였다. 시

16)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담론의 권력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현연, “지배담론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조희연, “한국의 정치 사회적 담론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2002.9.28, 연세대 위당관.

17) 근대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되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불과 0.75%의 유산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여성들의 온전한 참정권은 150여 년이 흐른 1944년에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의 ‘주어진’ 권리로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무수한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였음을 잘 말해준다.

민혁명에서 정점에 이른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근대자본주의 국가의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정립되게 한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사회 이후 산업화 혹은 자본주의화와 민주화를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자유주의적 견해나 맑스주의적 견해 역시도 비판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3세계에서 산업화로 인해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보는 근대화론적 견해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다원주의적 정치질서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견해들은 자유시장질서로서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확립의 매개과정에 작용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맑스주의적 견해에서도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계급지배를 은폐하는 정치적 외피(political shell)로 인식하고 국가는 시민사회로부터 독립된 외양을 가질 뿐이며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의 지배적 특수이해(부르주아 이해)를 반영하는 기구라는 인식 속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단순히 본질론적으로 부르주아 '독재'로 동일시하고 부르주아경제체제에 '민주주의'적 상부구조가 결합되는 과정 자체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투쟁을 통해 '강제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였던 것이다¹⁸⁾.

이러한 견해들에 대하여 산업화나 자본주의화가 사회적 다원성의 물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또한 "계급지배의 상황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지배의 도구로 전략

18) 물론 한 사회에서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유지되는 민주주의투쟁의 성과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지배계급의 타협성이나 개방성의 정도, 민주주의투쟁의 강도와 그에 따른 희생의 규모, 중간층 집단이나 세력의 태도, 초국민국가적 상황이나 요인, 우연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변수들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데 드는 '비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와 관련하여, Rueschemeyer D., Evelyn H. Stephens and J.D. Stephens(1992)는 한 사회에서 민주화(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인 계급관계(relative class power model)'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데 계급이나 계급연합 사이의 권력관계가 중요한데, 이는 국가기구의 구조, 힘, 자율성과 시민사회와의 관계, 시민사회의 발전 및 조직적 밀도, 초(超)국민국가적 권력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고 했다.

하는 것이 다반사며 지배계급에게 지배의 정당화라는 소중한 요소를 제공해주기도” 하며, “자본가 이해집단과 보수세력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 구사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이 전반적인 민주적 과정에 침식해 들어가는 정도에 의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훼손”¹⁹⁾ 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민주주의를 자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²⁰⁾. 이 점은 사실 근대자본주의사회의 지배적 계급이 반드시 민주주의적 상부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투쟁을 통해서 ‘선호’하도록 강제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접합’²¹⁾ {{}}이나 결과로서의 ‘선택적 친화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구조적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가 전근대사회구성체와 갖는 차이, 즉 정치와 경제의 분리, 각 층위의 자율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다²²⁾. 그러나 자본주의적인 토대가 민주주의적인 상부구조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적 국가 ‘유형’의 표준적인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적인 것이 되는 데에는 어느 사회에서건 민주주의투쟁이 매개된다.²³⁾ 어느 사회에서나 이러한 민주주의투쟁이 전개되고, 한국의 영웅적인 민주주의투쟁 역시도 바로 이러한 근대 이후의 보편사적 투쟁역사의 흐름 속에 있으며, 제3세계의 여타 민주주의 투쟁의 중요한

19) 랠프 밀리반트, “공산주의 정권의 위기에 대한 성찰”, 로빈 블랙번 편저, 김영희의 옮김, 1994, {물락 이후}, 창작과 비평사, 26쪽.

20) 이런 점에서 랠프 밀리반트의 견해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인 대의제적인 의회제도란 모든 경우 모든 맥락에서 비민주적이며, 사회주의에는 인민주권과 민주권력의 좀 더 직접적인 표현물이 필요하다(랄프 밀리반트, 앞의 책, 26쪽)”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며, “사회주의자들의 주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얻어진 민주적인 성과물을 가장 단호하고 설득력 있게 수호하는 것이요, 자본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가장 비타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본주의적 지배가 가한 속박에서 마침내 민주주의를 해방시킬 그런 사회 질서를 가장 잘 선전하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같은 책, 33쪽).

21) Bowles S. and H. Gintis 1982,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Capitalism”, Politics and Society, Vol. 11, No.1, p.44.

22) Poulantzas, Nicos, 1978,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 London: Verso.

전범의 하나로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²⁴⁾.

근대 이후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러한 투쟁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었다고 보인다.²⁵⁾ 첫째는 국가 '유형'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투쟁이다. 근대자본주의국가유형으로의 이행과 동시에 그 정치적 상부구조가 민주주의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투쟁이 존재한다. 시민혁명과 전후의 투쟁이 바로 이러한 수준에서의 투쟁의 예가 될 것이다. 즉 국가폭력성이 '전통적' 지배 주체인 지주나 영주 등에게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고 '경제외적 강제'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는 전근대적인 국가가 있는 반면에, 국가폭력성 발현의 민주주의적 규칙이 존재하는 근대자본주의국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민주주의의 성립은 국가폭력성의 현실화의 문맥에서 질적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는 국가형태 및 체제(레짐, regime) 수준의 민주주의투쟁이다. 예컨대 전근대국가에서 근대국가로 국가유형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대국가 범주 하에서도 독재적 국가와 민주주의적 국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파시즘이나 제3세계 군부독재와 같이 '근대적'인 '예외' 국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적 형태로 유지되는 '정상' 국가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국가형태 및 체제형태의 국가수준에서

23) 물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관계에 의해 부단히 왜소화되고 허구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Wood(1995)는 민주주의를 허구화하는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자본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 (democracy against capitalism)를 급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mocracy against Capitalism: Renewing Historical Mater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한국은 87년 6월 민주혁명이후 제3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물론 국민들은 개혁과 민주화가 대단히 천천히 그리고 지그재그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의 집단학살 및 부패문제로 인하여 투옥되는 것도 이러한 외부의 시각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국민들의 시민적·정치적·사회경제적 권리가 느리지만 꾸준히 신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나마 이러한 민주화의 진전은 바로 강력한 민주주의투쟁의 역사, 그리고 그를 이어받아 단절없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주의 확립투쟁, 민주주의 실질화투쟁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25)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앞의 조희연·조현연(2002) 참조.

민주주의투쟁이 전개되게 된다. 셋째 체제 이하의 수준, 즉 정권·정부·정책 수준의 민주주의투쟁이다. 예컨대 민주주의체제 하에서도 각 정권에 따라 시기별로 억압과 유화정책을 다르게 구사할 수 있다. 한 정부 시기에도 특정 시기에는 억압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공안정국 등) 다른 시기에는 유화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국가폭력성의 현실적인 발현양상이 다를 수 있다²⁶⁾.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 투쟁은 바로 이러한 여러 국가 수준에서 전개되는 반(反)국가폭력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 유형 수준에서는 국가폭력성이 사유화되고 전면화되어 있는 전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가 대립축이 된다. 국가 '유형'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은 바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된다

26) 폴란차스(1986)의 논의에 따를 때, 국가 일반, 국가유형, 국가형태, 레짐(체제) 수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폴란차스에게 있어서 국가형태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그에 따른 국가개입형태에 의해 주요하게 결정되는데,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 글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국가 '유형'의 중요한 특징은 민주주의적 상부구조가 표준화된 형태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고, 폴란차스가 이야기하는 국가형태에 있어서도 그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적 외양을 지니면서 전개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폴란차스의 맑스 해석을 원용할 때, 자본주의국가 유형의 기본특징인 정치와 경제의 분리, 경제적 수준에서의 '폭력의 결여'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국가의 억압적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Poulantzas, 1978, *ibid.*, p. 272). 이러한 억압은 상존하며, 이것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혹은 불개입과 혼동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국가유형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민주주의투쟁과 국가형태 및 체제(레짐)형태 수준에서의 민주주의투쟁, 정권 및 정부 수준에서의 민주주의투쟁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유형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투쟁은 자본주의적 국가유형의 표준적인 정치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정착하도록 하는 투쟁이 된다. 사실 자본주의국가유형이 반드시 민주주의정치형태를 취해야 할 필연성은 없다.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국가유형으로의 이행과정에서 군부독재와 같은 정치형태가 존재하였음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다음으로 폴란차스가 말하는 자본주의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국가형태 및 체제형태에 있어서도 그것이 민주주의적 형태를 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민주주의투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개재되게 된다. 다음으로 개별 정권이나 정부 수준에서도 권력이 비(非)민주주의적 방향으로 경도되어 비민주주의적 억압정책을 구사한다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투쟁의 매개역할이 존재하게 된다.

고 할 수 있다. 근대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폭력성의 발현에 대한 근대적인 통제장치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물론 시민혁명에서 정점에 이른 투쟁, 즉 전근대적인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수 천년동안의 저항투쟁을 통해서이다. 국가'유형'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취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형태 및 체제 수준의 민주주의 투쟁, 혹은 국가폭력성에 반대하는 투쟁은, 근대국민국가의 위기를 매개로 하여 성립하는 반(反)민주주의적 예외국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적 정상국가를 복원하기 위한 투쟁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국가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존의 경제적·계급적 질서가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저항에 의해 '위협' 받게 된다고 인식되는 지점에서, 반(反)민주주의적인 폭력적 국가가 출현하였다. 파시즘이나 군부정권 등이 바로 그러한 체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은 바로 파시즘이나 군부독재국가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역사적 희생들이 존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유형 수준에서 근대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 나아가 국가형태 및 체제 수준에서 민주주의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일정한 민주주의정권 혹은 정부 내에서 강경정책과 유화정책이 교차될 수 있다. 정권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은 정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성의 전면화에 대항하여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성격을 띠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의 성격을 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투쟁을 둘러싸고 국가폭력성이 전면화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나뉘게 된다.

이러한 국가폭력성의 발현형태를 한국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국가'유형'으로서의 근대민주주의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대한민국헌법 제정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년부터 87년까지

지의 한국사회는 군부권위주의체제라고 하는 예외국가적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도 국가폭력성의 발현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었던 60년대와 달리 70년대 이후에는 체제에 대한 동의기반이 축소되어 가면서 점점 더 일면적인 강압에 의존하는 체제로 전락해가게 된다. 70년대 유신독재체제의 시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주의’화된 독재체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저항에 의하여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87년 이후의 과정은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가폭력성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은 곧 국가폭력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87년 이전의 수많은 저항투쟁을 통해 국가폭력성에 대한 제도적·비제도적 한계로서의 민주주의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권적·정부적·정책적 수준에서는 각 국면마다 국가폭력성이 부각되는 국면과 반대의 국면이 교차하면서 유지되어왔다.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는 이러한 국가의 3가지 수준 모두에서의 투쟁이 중첩되어 있고 그 투쟁이 여러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법적·형식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가 국가의 근대적 원리로 정착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성격, 근대 민주주의공화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민주주의적 예외국가로 전락한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의 성격, 나아가 개별 정권이나 정부·정책 수준에서 출현하는 반민주적 폭력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다층적인 민주주의투쟁에서 단기간에 한국의 민주화수준을 제고시킨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고²⁷⁾, 이런 점에서 ‘중층적·압축성장형 민주주의투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27) 국가폭력성에 대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일반민주주의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조희연, 2001, “시민적 이슈와 시민운동에 대한 민주적 관점: 일반민주주의투쟁과 노동운동”, 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서출판 현장에서미래로).

그런데 이러한 여러 국가수준에서의 투쟁은 국가의 폭력성을 둘러싼 투쟁-폭력적 진압과 그것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투쟁은 기성의 질서가 허용하지 않거나 억압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이다. 통상 국가는 폭력성과 계급성을 가지는 실체로 규정되는데, 여기서 계급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존의 계급적·경제적·사회적 질서의 정치적 보증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시기에 국가라는 정치적 존재는 당시의 경제적·계급적·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들을 억제하면서 그 질서의 재생산을 정치적으로 보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폭력성은 이러한 계급성 실현의 수단인 셈이다. 국가는 지배적인 경제적·계급적·사회적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투쟁을 억제하고 그 질서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의 계급성이 경제적·계급적·사회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갖는 ‘기능’을 의미한다고 하면, 국가의 폭력성은 그러한 기능수행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이러한 폭력적 수단들은 개별적·국지적 지배주체들에게 분산되어 있었으나, 근대국가로 이행하면서 절대주의국가 시기를 경과하면서 이러한 폭력적 수단들은 ‘상비군’의 형태로 집중화되며 그로써 근대국민국가는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가 되는 것이다²⁸⁾.

이렇게 본다면 국가폭력을 둘러싼 민주주의투쟁은 민주주의라는 그릇 속에 담기는 민중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민주주의투쟁은 근대 이후 민주주의 투쟁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폭력성의 발현을 들

28) 근대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국민국가로 집중화하였지만 동시에 그 폭력 사용의 ‘합리적·합법적’ 규칙(베버의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상기하자)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이 합리적·합법적 규칙은 민중 자신들이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서 확립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배할 폭력적 수단을 지배자들이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지배의 폭력적 수단은 자신들의 대표들이 제정하게 되는 이중성이다(조희연·조현연, 2002, “국가 폭력·민주주의 투쟁·역사적 희생 : 총론”,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희생』, 함께 읽는 책).

러싼 민주성을 관철하는 체제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다층적인 계급적·사회적 투쟁과정이라고 할 때 민주주의는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더 나아가 참여적 민주주의 혹은 민중적 민주주의로 확장·심화되어 간다.²⁹⁾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투쟁에는 한편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국가폭력성에 대한 투쟁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민주주의 형식 속에 담기는- 민중들의 실질적 권리를 향한 투쟁이 내포되어 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들의 사회적 삶의 '정치적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형식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느냐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또한 민중들의 투쟁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정치적 형식 속에 담기는- 인간들의 사회적 삶을 인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에 담겨지는 내용도 달라져 왔다. 그 결과 민주주의라는 것도 똑같은 민주주의이지만 사회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으로 다른 이름들이 부여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민주주의를 특정한 정치제도로만 이해하는 것, 민주주의의 확립을 '일회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심화·확장하려는 세력간의 부단한 투쟁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다층적인 계급적·사회적 투쟁의 과정'³⁰⁾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정확히 한국의 민주화투쟁은 여러 국가수준에서 국가폭력성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29)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Clark D. Neher and Ross Marlay(앞의 책)는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i)정부지도자 선출에서의 시민참여, ii)공무직의 경쟁적인 선출, iii)시민적·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은 필자의 논의 속에서는 법적·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런 제반의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허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방향으로 심화·확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30) 조희연 편, 2001,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내용들을 확장하고 민중들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띠어왔다.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화투쟁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형식이 아니라, 민중이 인간답게 사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자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70년대 말을 거치면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민중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민중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은 운동의 목표와 지향을 의미하기도 하였지만 운동의 주체가 지식인 중심에서 기층민중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체구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민중주체주의적 사고의 맹아는 70년대 이미 생겨나고 있었다. 70년대 후반 민중 개념의 확산에 이어, 학문적으로도 민중사회학·민중신학 등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다.³¹⁾ 물론 70년대의 민중주체주의는 ‘민중주의’(populism)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혁명적 민중관(民衆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80년대의 민중은 계급적으로 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계급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 민중주체주의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의 비약에서 결정적인 것은 물론 국가의 야만적 폭력성이 양민학살에서 투명하게 드러났던 광주민주항쟁을 통해서였다³²⁾.

31) 조희연·김동춘, 1990, “80년대 비판적 사회이론의 전개와 ‘민중·민중사회학’”,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 80년대 한국사회의 분석』, 나남, 24쪽.

32) 주지하다시피 광주민중항쟁은 신군부세력의 지시에 의하여 안보의 파수꾼인 ‘국군’이 양민을 무차별하게 학살하였던 사건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야만적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가권력의 폭력적 본질이 양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 속에서 투명하게 드러났고, 이는 그에 대응하는 운동의 혁명적 인식을 강화시켜 주었다. 국가권력의 야만적이고 적나라한 폭력성은 국가권력의 본질을 투명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인식의 급진화는 3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첫째 투쟁대상에 대한 인식의 급진화(정권을 파쇼, 적 등으로 규정하게 됨), 둘째 투쟁대상의 종속성에 대한 인식의 급진화(식민지론이나 신식민지론의 등장), 셋째 투쟁주체에 대한 인식의 급진화(민중주체적 인식의 등장) 등이었다 (조희연, 2001, “5·18과 80년대 사회운동”,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쟁사』, 도서출판 고령).

이러한 인식은 80년대의 혁명적 민주주의운동 혹은 혁명적 민중운동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70년대 후반-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체도를 획득하는 운동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경제적 해방과 이러한 경제적 지배구조를 유지시키는 파시즘적 지배구조를 극복하는 혁명적 민주주의운동으로 재규정되게 된다. 이제 군부권위주의정권의 개발독재를 통해서 실현되는 체제가 민중착취적인 천민적 자본주의체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체제 극복 내지는 체제 개혁의 전망이 민주주의투쟁의 이름으로 제기되고 이슈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보편사적 의미에서 여러 수준의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투쟁으로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중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민주주의투쟁으로서 전개되었고 이러한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압축성장형 민주주의투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근대 이후의 보편적인 민주주의투쟁의 한 사례임을 확인하게 된다. 보편사적 민주주의투쟁이 제3세계적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사례의 하나가 바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민주주의투쟁에 남겨진 과제들

이상에서 필자는 한국 민주화운동이 갖는 전후 세계체제 속에서의 의미와 보편사적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상의 특징은 한국민주화운동이 과거의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군부권위주의정권과 투쟁하면서 그것을 퇴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권위주의를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본격 진입하게 되면서 새로운 조건에 놓이게 되고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³³⁾. 이것은 역설적이기도 한데, 민

주화운동이 대립물로 상정하고 있었던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러한 '지배체제 전환'은 역으로 민주화운동의 존재조건과 대결과제를 전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한 투쟁의 시기는 마치 '단선적인 역사발전의 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국민적 부당성이 확인된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해서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견결하게 투쟁하는 것이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성을 갖는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전투적이고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민주화운동의 '성공'으로 군부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이 의제화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 이런 점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클라이맥스까지 높은 도덕성을 인정받았던 한국민주화운동은 정작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는 민주화운동 진영 자신이 분열하고 그로 인해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적 왜곡에 대한 무방비상태가 되며 오히려 그것을 가속시키거나 편승함으로써 민주주의 이행 국면에서 민주세력의 힘을 단일하게 결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이 양김 씨를 포함하는 제도정치세력과 급진적인 운동정치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때, 제도정치세력들의 분열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동반분열하게 된 급진적 운동정치세력 모두가 이러한 왜곡화에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민주화운동의 분열사례는 엄혹한 탄압의 시기보다도 민주화가 가시화되는 결정적 국면에서 어떻게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 급진적인 운동정치세력이 제도정치세력으로부터 명백한 의식

33) Cho, Hee-Yeon, 2000, "Democratic Transition and Social Movement Change in South Korea", SungKongHoe University Nonchong No. 15. 남미에서 민선민간체제(civilian electoral regimes)가 출현하게 되면서 대중운동의 변화에 대한 서술로는 다음을 참조. Harding, Timothy and James Petras, 1988, "Democratization and Class Struggl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5, No. 3, Summer).

적·실천적 독립성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³⁴⁾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민주세력의 풍부화가 아니라 민주세력이 기성 제도정치세력에 '선택적 포섭'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진보주의 정치세력의 독립적 재정립이 지체되었다는 것이다. 50년대 이후 분단 상황과 60년대 이후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극우)보수주의 정치세력만이 '전면적 자유'를 향유하고 자유주의적 정치세력과 진보주의 정치세력이 억압되고 배제되었다고 한다면³⁵⁾, 87년 민주주의 이행이 본격화된 이후 자유주의정치세력의 독립과 발전(예컨대 반독재 제도정치세력이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통하여 집권세력이 되는 것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층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주의 정치세력의 독립과 발전이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권위주의시대에서 포스트-권위주의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민주화운동세력 혹은 민주화운동 지도부가 자기희생적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민주세력(democratic forces),³⁶⁾ 그리고 그들이 전개하는 민주주의투쟁이 변화된 조건 속에서, 어떤 과제에 어떻게 새롭게 복무하고 있는지, 또한 복무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개혁은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가, 즉 민주주의이행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전개되느냐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게 되고, 민주세력의 역할도

34)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의 진보정치와 변화와 그것의 제도정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4장(제도정치와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조희연, 2000, "민주주의 이행과 제도정치·민중정치·시민정치", 『계간 경제와 사회』, 제46호, 여름호.

35) 조희연,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36) 군부권위주의정권 시대가 종결된 이후에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동일한 조직적 편제, 동일한 인적·집단적 구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진영은 재편되고 부분적으로는 기성정당에 흡수되기도 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제반의 세력들, 그러면서 개혁에 동의하는 제반의 세력들을 민주세력이라고 통칭하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달라지게 된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경로는 크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구 권위주의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면서 구 권위주의세력이 일정한 제도적·비제도적 이니셔티브를 보유하는 속에서 전개되는 타협적 이행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구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거나 구 권위주의정권과 단절된 야당세력이 집권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구 권위주의정권과 연속성을 강하게 가지며, 후자는 단절성을 강하게 갖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두 경로는 구 권위주의세력이 얼마나 제도적·비제도적 힘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³⁸⁾. 한국의 경우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서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런 경로 속에서 ‘포스트-권위주의’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 민주개혁투쟁과 ‘왜곡된 국가’와 ‘왜곡된 시장’의 개혁에서의 선도성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이건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이건, 과거의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화운동의 과제는 권위주의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에서부터 구(舊)체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으로 변화하게 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제도의 이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의 회복 이후 구 권위주의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혁

37)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38) 대치선은 단순히 구 권위주의세력 대 민주주의세력의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과 같이 민주화의 결정적인 국면에서 분열 등에 매개되면서 반민주세력 대 민주세력의 대립은 왜곡되어 지역주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현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균열 인종적, 종교적 갈등 등에 매개되면서, 반민주 대 민주 대립구도가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는 왜곡되어 출현하게 된다.

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87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화두는 민주개혁으로 존재하여 왔다.

민주개혁의 대상이 되는 구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국가와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왜곡되어 있었고 이런 점에서 민주개혁의 과제를 왜곡된 국가와 왜곡된 시장의 개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왜곡된 국가의 개혁에는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정당개혁, 각종 권위주의적인 악법 및 제도의 개혁, 극우 반공주의적 통제질서의 개혁 등 다양한 의제들이 포함된다. 왜곡된 시장의 개혁에는 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왜곡된 시장 및 기업, '과잉독점화' 되어 있는 재벌체제, 왜곡된 축적방식의 개혁, 정경유착과 같은 부패문제³⁹⁾ 등이 포함된다.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민주개혁은 구체제의 기득권세력, 구 국가기구 요원들의 전면적 개편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은 불철저하며 느린 속도로 전개된다. 여기서 민주세력은 개혁의 철저화·급진화·'고속화(高速化)'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세력은 자연스럽게 구체제의 '민주개혁'이라는 대항담론을 부각시키게 된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이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정점에 이르고 이를 계기로 군부독재정권이 퇴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87년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의 도정에 오르면서, 지배세력의 입장에서조차 민주개혁의 담론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87년 이전 지배블럭과 저항블럭의 관계가 독재체제의 유지 대 민주주의 회복의 대치였다고 하면, 87년 이후에는 구체제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대치전선으로 이행하게 된다. 즉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독재체제의 퇴진과 구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지배블

39) 통상 발전국가론에서는 '발전성취적' 국가와 약탈적(predatory) 국가를 구분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약탈적이기 보다는 성과(performance)지향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고도성장의 성취가 있었지만 한국의 발전국가는 지속적으로 '약탈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다(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장 1절).

력도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구체제의 개혁방법 및 질적 성격, 속도를 둘러싼 투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개혁을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면서 그것의 불철저화와 타협적 진행을 도모하는 지배블럭과 민주개혁을 철저화하고 급진화하고자 하는 민주세력 간의 대치전선이 형성되게 된다.

왜곡된 국가와 시장의 개혁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구 권위주의세력의 저항이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저항 속에서 민주세력에게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동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철저한 구체제의 민주개혁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철저화를 위한 과제는 90년대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경로를 가고 있는 제3세계 및 아시아의 전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세력은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민주개혁의 철저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 과거 민주화운동이 해왔던 것과 같은 선도성을 발휘하도록 기대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투쟁과정에서의 선도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적 균열에 의해 매개되면서 민주개혁이 왜곡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교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된 한국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는 '변형군부정권'을 거쳐 1차 민선민간정부, 이어서 2차 민선민간정부 및 야당정부의 수립 등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모범적인' 측면이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부패와 광주학살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두 전직대통령이 투옥된 것은 한국 민주개혁의 과정에서 과거의 민주주의적 동력이 부단히 유지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세력이 민주개혁을 추동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선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민주세력이 추동하는 민선민간(民選民間) 정부의 개혁에 있어서 한 가지 핵심적인 구조적 조건은, 구 권위주의세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보수적 정치·사회 세력에 포위된 채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불철저화 및 왜곡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포위된 개혁'(surrounded reform)의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⁴⁰). 한

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재벌개혁이나 언론개혁 등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정부의 비록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개혁성이 발현되더라도 그것은 직간접적인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된다. 제1차 민선민간정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탈(脫)군부 민주화적 개혁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민주화를 확장하여야 하는 제2차 민선민간정권 시기의 개혁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정권 시기를 통하여 국가와 제도정치, 시장영역에서 구(舊)권력엘리트가 강고하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저항 속에서 전개되게 된다. 국민정부의 집권주체들이 갖는 제한된 개혁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경우, 그것은 저항과 반발 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개혁의 불철저화와 왜곡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민선민간정부의 개혁주체세력들의 불철저성이나 타협적 태도 등에서도 기인하게 된다. 즉 개혁추진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개혁 자체에 정치적 굴절이 나타나거나, 민선민간정부 주도세력들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에 안주하는 개혁의 타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의 관료화'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민선민간정부들의 개혁추진과정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개혁의 관료화로 인한 개혁의 정치적 굴절이 오히려 민선민간정부의 개혁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아왔다. 개혁과 사정이 정치적으로 굴절되고 그 순수성이 대중적으로 의심받는 방식으로 전개되게 되면, 반대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도덕성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개혁의 왜곡을 낳게 된다. 개혁이 좌초하게 되는 것은, 즉 반(反)개혁세력과 개혁세력의 싸움에서 후자가 약화되는 것은, 개혁의 성격 그 자체에서보다 개혁의 방법론적 오류에서부터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개혁의 방법론적 오류는 반개혁세력으로 하여금 개혁에 대한 우회적 반격을 행할 수 있게 하고 개혁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반개혁세력의 저항에

40) 조희연, 2001, "김대중 정부 개혁의 '복합성' 과 시민·사회운동", 『동향과 전망』 50호, 가을호.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추진세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개혁주체 자신들의 방법론적 오류가 누적됨으로써 개혁세력은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개혁의 좌초로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구 권위주의세력들에 의한 개혁저항과 민선민간정부 개혁주체들의 관료화로 인한 왜곡을 저지하고 민주개혁의 철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민주세력들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점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선민간정부의 수립(권위주의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 민선민간정부가 철저한 민주개혁을 진행하도록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2)과거청산을 둘러싼 투쟁에서의 선도성

민주개혁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과거청산의 문제이다. 여기서 과거청산이라고 할 때는 구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자행된 각종 폭력적 국가범죄, 그 폭력적 국가범죄에 의해 발생한 각종 희생(의문사 등)의 규명,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희생 및 영웅적 투쟁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 민주묘역의 조성 등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국가적 정신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작업들,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교육과 각종 예방적 제도화이다.

이러한 과거청산은 ‘기억투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범죄적 국가폭력, 그에 의한 민중들의 희생, 또한 그에 대항하는 영웅적이고 자기희생적인 투쟁, 그러한 투쟁에서 비켜나 있었던 ‘비접한’ 자신에 대한 성찰 등에 대한 기억 말이다. 이러한 기억을 둘러싼 투쟁은 단순히 과거의 투쟁이 아니라 현재적 투쟁이 된다. 왜냐하면 특정 시기의 지배적 집단은 지배집단의 권력 장악과 승리의 역사를 기록, 미화, 정당화하는 반면에, 지배집단의 범죄와 탄압의 기억은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식기억에 짓눌린 ‘비공식 기억’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져 간다. 사라져 가는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서 ‘정치적 역사’를 만들 때, 기억은 정치적 힘으로 변하게 된다.”⁴¹⁾ 기억투쟁

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 자신, 사회, 집단의 행위에 대한 성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얼룩진 과거를 용인했던 우리 사회의 자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독재와 그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역사에 기록하며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세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미래의 세대를 향한’ 현재적 투쟁이 필요하다. 미래는 올바른 기억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민주화운동은 과거의 것이 아니다. “과거를 소재로 한 미래를 향한 현재적 투쟁”, 이것이 바로 ‘기억투쟁’의 의의이다⁴²⁾.

기억투쟁의 대상이 되는 기억은 크게 3가지를 포함한다. 먼저 독재와 억압, 학살의 기억이며, 둘째는 그에 대항하여 자신을 던지며 희생하였던 영웅적인 투쟁의 기억, 해방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기억이다. 셋째는 독재와 억압, 학살에 대한 ‘침묵’의 기억이다.

기억투쟁은 현실적으로는 과거청산 투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기억투쟁의 의미를 갖는 과거청산투쟁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이행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부단한 투쟁들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투쟁에 힘입어 과거청산 작업은 부단히 지속되어져 왔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군부정권의 타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구세력이 일정한 이니셔티브를 갖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 (the political arena of settling the past)⁴³⁾ 을 제약하고 과거청

41) 김동춘, 1999,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인권과 평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42) Hirsch, Herbert, 1995, *Genocide of the Politics of Memory-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Chaper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Lapsley, Michael, 1998, “Confronting the Past and the Creating the Future: The Redemptive Value of Truth Telling”, *Social Research* Vol. 65, NO.4, Winter. Michael Lapsley(1998)는 “과거청산이란 과거를 대면하여 미래를 창출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43) Cho, Hee-Yeon, “Sacrifices Caused by State Violence under Military Authoritarianism and Dynamics of Settling the Past during Democratic Transition”, *Korea Journal*, Vol. 42, No. 4, Winter(forthcoming).

산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시적 한계를 부여하였다. 87년 이후의 과거청산투쟁은 바로 이러한 거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전시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었다. 87년 이후의 과정은 타협적이고 미봉적인 과거청산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과거청산’의 흐름과 이를 철저화하고자 하였던 ‘아래로부터의 과거청산’의 흐름이 각축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의 과거청산 투쟁과정을 간단히 서술하면, 87년 이후 등장한 변형군부정권인 노태우 정부 하에서 과거청산은 대단히 제약되었다. 다행히 국회에서 야당세력이 다수세력이 됨으로써 광주청문회와 5공비리 청문회를 통하여 과거청산을 위한 압박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결국 88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사과와 백담사 유배 정도로 타협되고 제약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구 권위주의세력과 반독재 야당세력의 일부가 재집권연합을 구성하여 성립한 정부이다. 반독재야당세력이 집권세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과거청산이 나타나게 된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집권연합에 참여한 구 야당세력이 ‘위로부터의’ 타협적 과거청산을 위한 시도를 한다. 김영삼 정부, 즉 문민정부에서 광주민중항쟁이 ‘광주민중화운동’으로 재정의되고 12.12사건이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부터의 과거청산은 역시 대단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에서 주어지는 거시적 한계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가장 극단적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서만 진상규명과 처벌이 그것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불철저성에 대항하여, 아래로부터의 과거청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된 것이 바로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운동이었다. 광주학살에 대한 형사 처벌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인 9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94년부터 ‘5·18내란음모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전개되었는데, 95년 7월 18일 5·18비상계엄의 확

대에서 전두환의 취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계기로, 전두환·노태우의 구속을 위한 투쟁이 전면화하게 된다. 특별히 이 투쟁에는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민적 여론을 선도하였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된다⁴⁴⁾. 그러나 문민정부의 근본적인 한계성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과거청산이 강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불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광주학살의 경우에도 발포명령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았고, 학살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비리사건을 명분으로 하는 '우회적' 처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에서 김대중 정부, 즉 국민정부의 수립은 일정한 반전(反轉)의 의미를 갖는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집권세력의 '변형'을 통해 구 체제의 재생산을 성공적으로 지속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국민정부의 성립은- 그것이 자민련과의 연합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 집권세력이 실권(失權)하고 반독재야당이 중심을 이루는 신집권세력으로 변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 공간이 이전에 비해 대폭 확장되게 된다. 과거청산이 법 제정의 형태로 보다 제도화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⁴⁶⁾ 이것이 바로 반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 확대를 활용하면서 과거청산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이것은 몇 가지 제도적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별히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는 독재 하에서 희생을 당한 부모님들의 헌신

44)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광주항쟁 당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80년 5월 18일부터 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상정하여, 이 기간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광주학살 책임자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45)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3장.

적인 투쟁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회 앞 천막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앞에서 1년여에 걸친 장기 천막농성을 유가협 및 민가협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속하였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2000년 4월에 시민·민중단체들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만들어져 외부에서의 국민 설득과 지속적인 압박전략을 구사하였다. 물론 멀리는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학생,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지만,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주체적 실천과 시민·민중단체들의 과거청산을 위한 조직적 노력들이 과거청산의 새로운 입법과 정부차원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과거청산과 관련된 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과거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다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며, 둘째는 독재시기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 즉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규정하고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며, 셋째 독재정권 시대에 이루어진 인권탄압과 각종 차별 및 억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이다. 넷째는 각종 민주화운동을 국가적 사업으로 기념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다. 이 법들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46)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과거청산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거의 범죄와 폭압, 그 희생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원상회복, 배상 등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청산운동은 국가민주화를 강제하는 과정이고 이것의 실현은 ‘결과’로서 국가화와 제도화를 내포하게 된다. 이것 역시 새로운 딜레마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둘러싼 이른바 ‘문부식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은 국가화와 제도화를 둘러싼 딜레마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문부식, 2002, 『잃어버린 시대를 찾아서: 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삼인; 조희연, 2002, 「‘과잉’ 과거청산인가 ‘과소’ 과거청산인가」, 『경제와 사회』 55호, 가을호; 조정환, 2002, 「활력의 윤리와 폭력: ‘우리안의 폭력’ 논쟁에 부쳐」, 『경제와 사회』 55호, 가을호; 김진석, 2002, 「위험한 근본주의에 빠진 ‘일상적 파시즘론’과 비폭력주의-임지현과 문부식, 그리고 박노자」, 『사회비평』 가을호; 이광일, 2002, 「우리안의 파시즘론을 비판한다」, 『시민과 세계』 2호.

〈표 4〉 국민정부 하에서의 과거청산과 관련된 법

	제정 시기 (통과 시기)	법안내용	비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9. 12.28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 해직, 투옥 등 각종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묘역사업)	본위원회 외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위원회,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지원분과위원회, 명예회복 추진 분과위원회, 장애등급 판정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 99년 7월 9일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 외 104명 발의, 98년 7월 30일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 외 29인의 발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999. 12.28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1994.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서 입법청원. 99년 이상수의원 외 155명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 4.30	인권에 관한 법령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등.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98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활동.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2001. 6.28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민주공원 조성,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보존 및 DB화,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 민주주의 시민교육사업, 민주화운동 정신 선양 사업,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99년부터 민주재단 중심으로 법제정운동이 전개되고, 2000년 4월 발족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캠페인을 전개.

어떤 점에서 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개혁과 과거청산의 불철저화를 향한 보수적 힘(87년의 패배의 결과로서 현실화)과, 구조적 한계 내

에서도 이를 추동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힘의 각축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힘의 각축 과정은 새롭게 민주주의 이행의 길에 들어선 많은 아시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거의 실종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ONTRAS(Commission for Disappearance and Victims of Violence)'⁴⁷⁾ 같은 단체들이 활동이 사회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볼 때,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놓여 있는 사회에서 민주세력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청산의 철저화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정권이 퇴진한 이후의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세계화에 대응하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을 향한 동력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

제3세계의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은 비록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투쟁에 의해 생취되고 강제된 것이지만 그 민주화된 체제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주의인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세력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즉 정치적 제도의 형식은 민주주의이지만 그 경제체제적 성격이 시장 중심적이고 동시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체제로 이행해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에 의해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지만, 경제정책적 지향이라는 점에서는 과거의 근대화담론이 국제경쟁력 강화 등 세계화담론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은 혹은 어떤 점에서는 이전보다 가혹한 성장 지향적 사회로 유지·재생산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 개발주의가 극복되면서 복지 지향적이고 사회성이 강화

47) 콘트라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oengky Indarti, 2002, "KONTRAS: The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 Asia Solidarity Quarterly, No. 7, Winter.

된 체제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권위주의정권이 구(舊)개발주의체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민주주의체제는 신발전주의체제(neo-developmental regime)⁴⁸⁾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변화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민주화가 갖는 이중적인 성격에 기인한다.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화 경제적 자유(주의)화 양측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주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와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국민들에 대한 억압정책이 극복되고 자유화와 자율화가 증진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에 의한 위계적인(dirigiste) 시장통제와 기업통제가 완화되어 시장과 자본의 자율성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는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구체제의 비민주적 성격, 국가억압성에 대한 개혁을 수반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관치주의적 성격이나 국가주도성에 대한 개혁을 수반하게 된다. 특별히 경제적 자유(주의)화는 양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에 의한 왜곡된 시장통제와 그 왜곡을 극복하는 계기가 제공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및 자본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⁴⁹⁾.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관찰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신자유주의적 버전(version)의 자유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경제적 자유주의에는 구(舊)자유주의적 성격도 존재하지만, 현단계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운동의 지구화를 전제로 하는 '신' 자유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선민간정부인 문민정부 및 국민정부 하에서 구체제의 '정치적 자유주의'적 개혁(군부정권의 개혁, 과거의 억압적 국가기구의 개편 등)이 실시되고 동시에

48) Cho, Hee-Yeon, 2001, "The Structure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Regime and Its Transformation",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1 No.3, Dec. 2000.

49)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자세한 서술로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2002, 「정치적 자유화의 '축복'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정치경제개혁과 사회운동」, 『시민과 세계』, 2호.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적 개혁이 동시에 더구나 가속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설적인 것이다. 국민정부마저도 구체제의 ‘정치적 자유주의’적 개혁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IMF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국민정부에서는 재벌개혁과 같은 일종의 구(舊) ‘경제적 자유주의’적 개혁도 실시되지만 민영화와 국내외환시장의 개방 등 신 ‘경제적 자유주의’적 개혁이 동시에 실시되게 된다. 여기서 구 ‘경제적 자유주의’적 개혁은 ‘정치적 자유주의’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자유시장’의 확립에 부응하는 정책기조를 선택하게 된다. 사실 IMF경제위기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압도적인 규정성이 없었다면, 국민정부에서는 ‘사회적 자유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이 기대되고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50년만의 야당정부인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에서의 진보성은 경제위기 극복에서 리더쉽의 필요성과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규정력에 의해 주변화되고, 구 시장질서의 ‘합리적’ 개혁을 실시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구축으로 나아가게 된다. 역설적으로 민주화, 민주주의 이행은 (독재적) 정치와 (관치주의적) 경제의 분리를 통하여,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전면적 실시를 가능하게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사실 개방화 및 민영화는 전두환 초기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전 시기 독재의 ‘약점’은 정치적 ‘조절’을 불가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적인 개방화와 민영화를 총체적인 정책기조로 정립하지는 못하였다(그러했다면 독재정권에 의한 수탈강화라는 의미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민선민간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조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물론 김영삼 정부는 과거의 ‘타협적 자유주의’ 분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김대중 정부는 ‘비타협적 자유주의’ 분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차이는 있으나, 거시역사적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발독재 시대의 종결이 사회적 자본주의, 복지국가로의 이행 과정이 될 수도 있었으나, 반대로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압력 속에서 비(非)사회적,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경도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영향하에서 경제적 자유주의화의 정책들은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민영화, 개방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율화 등으로 표출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권위주의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더욱 공적 부문의 축소, 고용의 불안전화, 비정규화, 소득불평등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과거의 균열의 해소와 동시에 새로운 균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이것을 필자는 정치적 자유주의화의 축복과 경제적 자유주의화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⁵¹⁾. 이처럼 경제적 자유주의화의 재앙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은 ‘정치적 자유화를 담보로 한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중투쟁의 과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화와 동시에 경제적 세계화정책이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실시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과제에 민주화운동이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아시아의 민주화운동 일반이 직면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민주화를 담보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키고 민중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과제가 한국의 민주세력과 제3세계 민주세력에게 공히 주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대항담론의 중요한 내용은 ‘공공성’ ‘사회성’의 유지 및 확대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이행국면에서 새로운 지배담론이 세계화담론으로 정식화된다고 하면, 저항담론은 반세계화 혹은 공공성 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⁵²⁾.

이것을 필자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이라고

50) 최장집 교수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균열을 권위주의(적 실제) 대 민주주의(적 의형)(제1균열), 공정한 분배 대 발전주의(제2균열),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균열(제3 균열)로 나누고 있다(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2부 1장. 한국정치균열의 구조와 전개). 한편에서 정치적 자유화를 통해 이전의 균열을 주변화하면서 세계화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중심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51) 앞의 글. 필자는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실제에 있어 민주주의를 허구화시키고 있다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손호철, 1999,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5장.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표현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민주세력 내부의 변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저항이 주로 반(反)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이 투철한 급진적 사회운동으로 협애화되었으나, 점차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항하는 민중적 운동과 다양한 시민적 운동(시민운동, 지식인운동, 종교운동 등)의 연대로 나아가게 된다.⁵³⁾ 필자는 신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은 구(舊) 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과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도 더 일반민주주의 투쟁의 사회적 기반이 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서구에 있어서는 전후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시대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복지국가의 역전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제3세계에 있어서는 '복지 없는' 개발주의적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개발주의적 정책에 대한 의식적 비판과 조직화된 저항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하였던 제3세계 민주세력들이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복무한다면 훨씬 넓은 사회적 기반 위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지배담론으로서의 세계화담론에 과거의 담론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자본운동을 배경으로

- 52) 이러한 공공성 담론은 민주화와 세계화의 전개 속에서 새로운 대항담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혁명적 민주주의운동으로 변화하고 이와 함께 혁명적인 반자본주의적 담론으로 고양되어 갔다고 하면, 87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의 동시적 진전 속에서 사회주의 붕괴의 영향으로 인하여 반(反)자본주의담론은 주변화해 갔다고 할 수 있다. 대안체제로 상정되는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는 '대안이 없다' (TINA: There is no alternative) 증후군을 확산시키면서 반자본주의적 담론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 담론은 '적극적' 담론의 성격 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성 담론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 복합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보적 담론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사회적 자유주의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 53) 시민운동의 경우는 정치적 자유주의화의 진보적 측면을 적극 긍정하는 속에서 역설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화의 파괴적 결과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조희연, 2001, "김대중 정부 개혁의 '복합성' 과 시민·사회운동", 『동향과 전망』 50호, 가을호 참조.

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과거 반공주의-개발주의적 권위주의정권이 담지하고 있었던 근대화담론이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적 축적기반을 갖고 있는 초기산업화 단계의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자본은 범지구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지구적 축적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범지구적 자본운동에 대한 공적·사회적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⁵⁵⁾. 자본운동의 범지구화의 핵심적인 현상은 바로 이처럼 초국적 금융 자본의 광폭적 흐름이다. 국민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전지구를 상대로 운동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국제적 차원에서 더욱 심대한 문제로 표출되게 만든다.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적 시장질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자유경쟁적 시장을 만들기 위한 역사로 이해한다. 그러나 민중적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시장의 가혹성과 자본의 비인간적이고 무차별적인 수탈에 대한 공적 규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19세기에 확립된 구(舊)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강화되면서 구 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해 여러 공적·사회적 규제 장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또한 이러한 규제 장치들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진영간 대립과 자본운동의 일국적인 한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은 바로 그러한 규제 장치를 실효성 있게 하는 조건들 자체를 뛰어넘어 범지구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결 속에서 자본운동에 대한 범지구적 규제장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지구촌 민주세력의 '현안'이 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자본운동에

54) Dirlik, Arif, 설준규 외 옮김, 1998,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창작과 비평사.

5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사회운동적 대응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ho, Hee-Yeon, 2000, "Civic Action for Global Democratic Rule in Response to Neo-liberal Globalization", Inter-Asian Cultural Studies, Spring 2000, Vo. 1. No.1. Routledge; 조희연, 2001,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안행동", 조희연 편,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대해 공익적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자본운동의 병폐에 대응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운동을 통해 달성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배경으로 하는 자본운동의 범지구화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영토적 기반을 침식하고 주권적 자율성을 제약하게 된다. 새로운 범지구적 민주주의⁵⁶⁾의 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적 지형에서 확보된 민주주의의 '사회적' 성격은 껍데기로 되어가게 된다. 즉 국내적 계급투쟁과정에서 획득된 일국적인 사회보장 기능과 경제관리 기능은 파괴되며 점차 빈 껍데기로 되어 간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역설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는 반독재와 반(反)시장주의투쟁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권 시대로의 이행에 따라 오히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게 되며, 새로운 민간정부(civilian government)들은 정치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신성장주의적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민주정부' 하에서 점점 더 정치와 시장은 분리되고, 국가의 장래가 유권자들의 손을 떠나 세계시장의 동요에 맡겨지게 된다. 민선민간정부가 제3세계에서 신자유주의의 더욱 좋은 정치적 외피(political shell)라고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민주주의투쟁은, 단순히 일국적 저항투쟁으로서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초국민국가적·국제주의적 대항담론으로 재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해방적 국제주의'의 관점이 현시기 민주세력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과거 일국적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싸웠던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장과 민주개혁의 철저화를 위한 동력으로 표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적 규칙의 확립을 위한 동력으로도 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의 계승이 단순히 국내적 차원으로만 한정될 수 없는 이유이다.

56) Held(1995)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범지구적 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를 주장한 바 있다(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London: Polity Press). 여기서는 특정한 이론적 맥락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범지구적 공적 규제를 말한다.

6. 요약 및 맺음말

요약한다면, 61년 5.16군사쿠데타는 제3세계 권위주의 시대 혹은 개발 독재시대를 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맞서는 한국의 영웅적인 민주주의투쟁은 바로 그 군부권위주의시대의 종말을 앞당긴 선도적인 투쟁이었다. 여기서는 통상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여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심화·확장을 위한 운동을 포괄적으로 민주주의투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드러내는데, 첫째는 학생운동이나 지식인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둘째, 제3세계 많은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큰 희생들이 권위주의정권의 공격적 학살행위나 특정 폭력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경우, 폭력적 권위주의정권에 의한 학살, 의문사 등과 같은 '소극적 희생'(victim)에 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적극적 희생(sacrifice)이 많았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화투쟁의 일반적인 투쟁형태는 저항의사를 표출하는 집회나 시위 등이 많은데,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고양국면에서도 공격적 투쟁보다는 분신, 투신 등의 자살항거와 같은 자기희생적인 투쟁양식을 채택함으로써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민족사적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째, 2차 대전 이후 미국 헤게모니 체제하에서 작동하고 있던 반공주의-개발주의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선도적인 저항투쟁이었고 그러한 선도적 투쟁을 통해 여타의 제3세계 민주화운동을 촉진하였던 모범사례였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민주화운동은 근대 이후 다층적인 수준에서의 국가폭력성에 대항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투쟁사의 일부이며, 여러 수준의 민주주의투쟁이 증충적으로 전개되고 동시에 압축적으로 전개되는 '증충적·압축성장형 민주주의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反)민주주의적 국가폭력은 다양한 국가수준 국가유형, 국가형태 및 체제 수준, 체제 이하의 수준

에서 표출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수준에서 전개되게 된다. 60년대 이후 전개되고 현재도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국가의 3가지 수준 모두에서의 투쟁이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법적·형식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가 국가의 근대적 원리로 정착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성격, 근대 민주주의공화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반민주주의적 예외국가로 전락한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의 성격, 나아가 개별 정권이나 정부·정책 수준에서 출현하는 반민주적 폭력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다층적인 민주주의투쟁에서 단기간에 한국의 민주화수준을 제고시킨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중층적·압축성장형 민주주의투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의의를 갖는 한국민주화운동은 큰 족적을 남겼다. 민주화운동은 87년 이후 과거의 권위주의체제를 민주주의체제로 전환시키는 도정에 한국사회를 위치시킴으로써 과거의 권위주의체제를 민주주의 이행의 도정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결코 민주화운동 정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제반의 사회운동들을 새로운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면서 새로운 과제 앞에 서게 만들었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투쟁이 아시아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퇴진 및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표에서 구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과제에는 권위주의하에서 왜곡된 국가와 왜곡된 시장의 개혁을 포함한다. 이제 민주화운동의 계승은 바로 이러한 민주개혁의 철저화를 위한 동력으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주의이행의 과정은 과거청산을 둘러싼 민주세력과 구 권위주의세력의 투쟁과정이다. 과거청산에는 구 국가기구에 의한 범죄적 국가폭력의

진실 규명, 과거 권위주의체제의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후손에 계승하기 위한 민주묘역 조성 등의 기념사업, 인권탄압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화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변형군부정권과 민선민간정부를 거치면서 아래로부터의 치열한 과거청산 투쟁을 통해 과거청산을 진전시켜 왔다. 한국의 민주세력은 바로 이러한 과거청산의 철저화를 통해 아시아 민주세력의 중요한 전범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민주화의 과정은 세계화의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편에서는 정치적 자유화를 진전시키고 그것을 담보로 하여 경제적인 자유주의 혹은 경제적 시장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주세력으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화를 담보로 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모순에 대결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구(舊)개발주의 체제를 민주주의적 신(新)개발주의 체제로 변형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구 개발주의의 신개발주의로의 전환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영향하에서 전개된다. 실제 민선민간정부는 세계화담론을 부각시키면서 과거의 국가주도적인 경제를 시장자율적인 질서로 전환하며 탈(脫)사회화된 시장중심 사회로 전환하려는 각종 정책을 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민주세력은 바로 이러한 반신자유주의·반시장주의적 투쟁을 통해서 민중의 사회적·공공적 이해를 지켜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일국적 차원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범지구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글로벌 신자유주의 물결이 자본운동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 차원에서 세계화된 자본운동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공적·사회적 제동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세력의 과제는 완결될 수 있다. 이것을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민주주의투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어떤 점에서 한국사회는 우리의 '화려한' 민주화운동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의 지표에서만 자부심을 찾으려 하지 말고 민주주의투쟁의 선진국, NGO선진국의 위상에도 자부심

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통상 영웅적인 ‘세계적인’ 민주주의투쟁의 역사는 서구의 역사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한국 민주화투쟁의 역사는 우익군부권위주의정권이 풍미하던 60년대 이후 세계사 속에서 빛나는 한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민주화투쟁은 한 세대 이상을 관류하였던, 그리고 ‘반동’의 물결이 몰아치던 60·70년대 세계사 속에서 세계민주진보진영의 귀감이자 흠모사례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안목이 부족하였다. 이제라도 우리는 민주화투쟁을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간직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 민주화운동을 새로운 눈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안목으로 독해(讀解)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독해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사회운동 및 민주화투쟁의 경험 속에서 사회운동의 보편적인 진실들을 발견해 내야 한다. 고도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역동적인 전개, 민주화투쟁의 전투적인 전개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기념, 새로운 연구, 새로운 해석, 실천적 계승, 그것의 세계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脫)식민화적 시각 혹은 민족 주체적 시각에서의 민주화운동 재해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0-80년대 군부권위주의정권 시기뿐만 아니라 최근사례라고 할 수 있는 96년 말 97년 초 노동법 파동을 둘러싼 파업투쟁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노동법 파동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글로벌한 자본공세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그러한 공세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투쟁을 남한의 노동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침체한 서구의 노동운동에 비해, 또한 분산된 제3세계의 노동운동에 비해 역동적인 한국의 노동운동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대해 가장 선도적인 투쟁을 행한 것이었다. 노동시장의 자유화, 유연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의 세계적인 자본공세에 우리는 가장 훌륭한 저항자였다. 더구나 서구의 노동운동이 복지국가 해체에 다분히 수동적

이고 방어적으로 저항했다면 우리는 공세적인 저항의 전범을 만든 셈이다. 최소한 97년 투쟁은 그랬다. 2000년 4월 낙천낙선운동도 일본 및 태국 등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수입'하고자 하였을 정도로 의미 있고 파괴력 있는 운동이었다. 시민운동이 갖는 영향력과 발언력의 측면에서도 물론 과도기적인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은 NGO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1919년의 3.1운동, 60년대 이후의 반독재민주화투쟁,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민주화투쟁, 87년 및 90년대의 노동자투쟁들, 90년대 후반 및 2000년 초반의 시민운동 등의 사례들은 한국이 각 시기마다 선도적인 사회운동투쟁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속화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60·7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당시 서구뿐만 아니라 독재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제3세계 민중들에게는 모방해야 하는 투쟁의 전범이었다. 광주민주화투쟁을 포함하여 전투적인 우리의 투쟁은 아시아 후발산업화 과정에서의 개발독재체제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집단학살에 맞서서 가장 선진적으로 투쟁했던 사례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인식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사회운동의 경험은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운동의 온갖 지혜는 서구의 이론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고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중요한 인식의 혁신은 우리의 현실과 운동을 자부심 있게 응시하고 그것을 인류역사의 보편사적 흐름 속에서 재해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3세계의 전후 역사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회적 목표가 있다고 하면, 자주 및 독립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위한 불굴의 투쟁정신이야말로 후손에게 계승하고 전승하여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주의에 반대하면서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며 쓰러져 간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하나의 버팀목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치며 쓰러져 간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다. 많은 제3세계 나라에서 독립투쟁은 독립기념관의 형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과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제 다시 독재와 권위주의 망령이 이 땅에 되살아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의 민주화투쟁이 정사(正史) 속에 위치 지워져야 한다. 다시 독재와 권위주의가 부활한다면 '민주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선열보다 더 영웅적인 민주화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자세와 결의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야 하며, 혹시나 독재와 권위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민중들의 무수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